

#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 11

통권 32호

November 2007

## | 이달의 이슈 |

공연예술산업

김 문 환(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 | 경제포커스 |

문화예술과 서울시의 문화경제 지표

장 광 렬(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대표)

뮤지컬, 그 판타지가 세계를 물들인다

박 용 재(스포츠조선 편집국 부국장)

## | 생생리포트 |

서울시 수출입 변화 추이

서울시 생활물가 변화 추이

시장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 | 자치구탐방 |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을 통한

강남구 지역경제 활성화

주 윤 중(강남구청 도시경제계획단장)

## | 경제동향 |

경기/고용/부동산/금융

## | 부록 |

통계표

# 서울경제

2007. 11

## 차 례

<b>이달의 이슈</b>	3	<b>공연예술산업</b> 김문환(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b>경제포커스</b>	11	<b>문화예술과 서울시의 문화경제 지표</b> 장광렬(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대표)
	18	<b>뮤지컬, 그 판타지가 세계를 물들인다</b> 박용재(스포츠조선 편집국 부국장)
<b>생생리포트</b>	33	<b>서울시 수출입 변화 추이</b>
	40	<b>서울시 생활물가 변화 추이</b>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b>자치구탐방</b>	47	<b>「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을 통한 강남구 지역경제 활성화</b> 주윤중(강남구청 도시경제기획단장)
<b>경제동향</b>	59	<b>요 약</b>
	60	<b>경 기</b>
	70	<b>고 용</b>
	78	<b>부동산</b>
	86	<b>금 융</b>
<b>부록</b>	99	<b>통계표</b>

## 공연예술산업



김문환\*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moonsoo@snu.ac.kr

우선 표제에서 보이듯이 공연예술과 산업을 붙여 쓰는 사고방식에 대해 나 자신이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의 전체적인 양해사항으로 삼고자 한다. 미학이라는 학문이 18세기에 그 학명이 확정되고 그 내용이 본격화되면서 줄곧 순수예술을 주요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낯설음이 혹시 이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날 우리가 순수예술(fine arts)이라고 부르는 체계 역시 18세기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상식인바, 그전까지는 건축, 조각, 회화, 음악과 문학, 그리고 무용과 연극으로 각각 분리된 채 병존되어오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이름다운 자연을 모방함으로써 쾌를 생산하는 활동”(샤를르 바뎬)이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가족 명칭이 필요하게 되면서 순수예술이라는 새로운 조어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당시로서는 오히려 예술과

\* 저자 학력, 경력 및 관련 저술:

- 서울대 학사, 석사(미학),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박사(철학)
- 서울대 인문대 미학과 교수(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역임
- 「문화경제론」(서울대출판부, 1997)

자연의 상관관계가 더욱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18세기가 그와 동시에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의 시대였고,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음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산업시대, 아니 후기산업시대를 일관되게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논리가 예술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미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영향은 특히 20세기에 들어서서 더욱 심화되었은즉, 이는 이른바 대중사회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한편으로는 예술이 지닌 가치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복제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술이 지닌 일종의 신비로운 분위기, 달리 말하자면, 영기(靈氣, Aura)가 상실되고 만 것을 애석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비판이론이라는 일단의 사회철학자들은 후자에 속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을 대표하는 대중예술이니 문화산업이니 하는 표현을 일종의 경멸을 나타내기 위해 조어해내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비판이론을 지나치게 엘리트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라는 총칭 아래 대중문화를 당연시하는 새로운 학문적 노력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 충실하자면, ‘공연예술산업’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의 현재적 상황을 다분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기술, 해석,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대중문화와의 연계를 일종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한편 경제적 이윤증대의 기회로 삼으려는 방안을 논의하려 할 것이다. 양자 모두 공연예술이 관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정서적 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이른바 ‘창구효과’에도 관심을 둔다는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 글의 게재되는 매체인 「서울경제」가 “서울시 경제동향분석을 통해 서울산업경제를 진단한 후 동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활동 편의제공 및 서울시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간행물”이라는 자기이해를 알려온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 글은 당연히 후자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는 듯싶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이해를 뒷받침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코 어느 개인이 해낼 수 있는 작업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자체 내에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해야 함직한 일감이다. 더군다나 앞선 자기이해의 취지를 보면 기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표와 서울시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다는 목표를 이중적으로 지니고 있는데, 나로서는 오히려 후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연예술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운위한다는 것은 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예술을 아무리 높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예술과 문화가 전반적으로 경제 안에서 작동하는 개인과 집단들에 의해 생산되며, 따라서 그러한 물질세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바로 이처럼 예술과 문화가 전반적인 경제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경제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에서는 이와 연관되는 산업의 역사적 성장과정을 밝혀내고, 소비, 생산 그리고 예술시장들의 기능, 재정적 문제들, 공공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직업으로서의 예술, 예술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그리고 대중매체와 문화·예술의 상호관계들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경제학이 태동한 직접적인 동기는 조형 예술이나 문학도 마찬가지이지만 연극, 오페라, 교향악, 그리고 무용 등을 망라한 공연예술들이 이른바 ‘시장실패의 요인’ 을 숙명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주목한 『공연예술: 경제학적 딜레마』(1966)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아직도 다음과 같은 주장이 통용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그것이 경제학에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화와 자화상을 위해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장을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 에 맡겨두면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거나 왜곡된 형태로 잔존할 수밖에 없는 공연예술을 건전하게 살려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공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면, 굳이 공공기관을 개입시킬 이유가 없다. 기업은 원래 이윤추구에 매진하게끔 되어 있다. 공공정책은 다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의 최소화 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이 이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바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태조사가 불가피한데, 불행히도 우리 공연예술계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는 너무나 희박하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펴낸 「2005공연예술실태조사」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이 자료조차 공연행정, 공연시설, 공연단체, 공연기획사의 조사 자료가 상호 발전적 관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현 단계에서는 그 상관성을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우선 이

조사의 결과 값을 참조하여 서울특별시의 상황 윤곽을 그려보기로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예산을 보면,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문화예산 총액은 119조 5,030억원 규모인데, 그중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관광분야를 더한 문화예산은 3조 6,129억원 규모로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서울은 경기, 경북, 경남, 전남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이를 좀더 세분해서 보면 공연예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에 투입된 예산총액은 전국적으로 1조 5,448억원 규모인데, 서울은 경기도에 이어 규모로는 두 번째이지만,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6개의 상위집단에도 끼어있지 못하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밀착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가운데 공연예술분야에 투입된 예산총액은 약 7,267억원인데, 서울은 879억원(전체의 12.1%)으로서 경기도의 1,913억원(전체의 26.3%)보다 낮고, 경남의 52억원(전체의 7.2%)보다 한 단계 높다. 비율로는 대구, 대전에 이어 3번째에 해당하고, 인천이 그 뒤를 잇는다. 사용처별로 보면 시설건립에서 경기도가 1,718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서울은 311억에 불과하다. 공연시설 운영 및 지원예산에서는 서울이 365억원으로 가장 높으나, 공립 공연단체 운영 및 지원예산에서는 서울은 26억에 불과해 경기 277억에 비해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민간 공연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에서 75억을 투입하여 경기(66억), 충남(61억), 경남(40억)을 상회하고 있다. 공연예술축제 관련예산 및 지역축제의 공연행사 관련 예산은 서울이 85억으로서 경기 137억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러나 건수로 보면 경북(24건), 경기(18건), 부산과 충북(13건)에 이어 네 번째(7건)이다.

이상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서울은 인구 1천여 만 명을 안고 있는 대도시로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규모나 비율 면에서 처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예술은 결국 민간들의 노력에 의해 꾸려지고 있는 셈인데, 조사가 가능한 공연단체 306개가 연간 1,659개의 작품을 공연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공연들을 관람한 유료관객이 197만 명인데, 무료관객은 145만 명에 이르러 거의 맞먹는 실정이다. 유료관객의 비율을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역시 대부분이 서울특별시민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 많은 공연단체들이 시민 공연예술 향수를 위해 희생적으로 기여하는 데 대해 행정당국은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서울의 272개 단체가 벌어들인 수입이 146억으로서 단체당 평균 5,36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장권 판매실적을 가진 숫자만 헤아린다면, 150개 단체가 9,730만원의 평균수입을 올린 것으로 읽혀진다. 총수입 규모로 보면, 서울의 경우, 255개 단체가 평균

2억 5,857만의 실적을 보이지만, 연간 총지출에서 보면 서울은 902억으로서, 단체 당 평균 지출액은 3억 5,788만원으로 결국 1억 정도는 늘 적자인 셈이다.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민간기업의 기여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전국 규모로 볼 때 1,341개의 공연단체의 연간수입 중 민간의준수입의 규모는 251억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최근 메세나 운동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나 일본과 같이 협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기업의 생리상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증대에 도움이 될 때야 생색을 내게 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질수록 예컨대 신정아 사건과 유사한 사태만을 양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최근 뮤지컬 시장의 성장을 놓고 이를 공연예술산업 전반에 걸쳐 해당할 수 있는 듯이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이 분야야말로 ‘정글의 법칙’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흥행보증 수표라 할 라이선스 뮤지컬을 위한 획득과정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바, 보통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경우 로열티가 12%가 일반적인 선이지만, 흥행에 성공한 작품의 경우 15%이상을 넘어 20%에 육박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100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15억 원 이상이 고스란히 로열티로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라이선스는 확보하고도 공연장을 구하지 못해 공연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에 라이선스 소유자는 선금금을 올리게 마련인데, 이는 수입금이 예상에 못 미칠 경우에도 회수가 불가능하다. 자연히 창작 뮤지컬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는데,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기업적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결국 가벼운, 너무나도 가벼운 뒷골목 뮤지컬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실적을 올린다는 뮤지컬의 경우가 이 지경인데, 여타 부문은 말할 것도 없다.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자금공급환경, 마케팅 환경, 그리고 권리관계 관련환경의 미정비로 인한 고도산업으로의 발전 불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행정당국이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SDI**